

투자목적 및 리스크에 따른 은퇴 준비 금융상품 알아보기

(1) 공적연금

→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주택연금/농지연금 역시 정부에서 보증하고 있는 상품이니만큼 큰 범주의 공적연금에 포함시켜, 이들 연금을 활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규 책임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fairydragon4@truefriend.com

이윤미 책임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dbarj@truefriend.com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대표주자로 흔히 3층 연금의 첫 번째로 꼽는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안정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8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재정추계를 거치면서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2년 8월 말 기준 세계 연기금 규모 3위(380조 원)를 기록했으며, 우수한 수익률과 국가지급 보장 등을 내세워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피델리티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된 노후 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다.

전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도입

국민연금이 여타의 상품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의무가입이라는 점**이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지역가입자 또한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주목할 부분이다. 저소득자일수록 낸 돈 대비 돌려받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노후 최소생활 보장에 기여한다. 비록 고소득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 수명 이상 살 경우 낸 돈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소득자일수록 낸 돈 대비 연금 수령액 많아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 중 물가상승 리스크를 완벽히 헤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다. 그 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통해 질병 및 사망에 대비할 수 있어 보험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에서 주의할 부분은 **정책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재정검정 추계를

재정추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수령액 줄어든 수 있음을 주의해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받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추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표1 국민연금의 특징 및 장·단점

특징	장점	단점
- 강제성 - 소득재분배	- 넉넉한 돈 대비 많이 받음 - 물가상승 반영 - 국가 지급보장	정책 리스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및 급부액 조정 가능성)

자료: 국민연금공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투자 수단으로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살펴보면 의무가입을 제외한 부분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은퇴 후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자신이 아래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받게 될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단절 보완

첫 번째는 반환일시금 반납이다. 1999년 이전에는 소득 단절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만약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함으로써 기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¹⁾ 특히 1999년 이전에는 연금액에 직결되는 소득대체율²⁾이 현재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할 수 있다.³⁾

두 번째는 추후납부 제도이다.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예외를 신

1) 1999년 이후 반환일시금 수령조건이 60세 도달 당시 가입기간 미달, 사망, 이민 등으로 제한되었으며 현재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반납 불가

2)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액 비율을 의미

※국민연금 목표 소득대체율(40년 납입 기준)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p씩 감소)	40%

3) 최종 소득대체율은 납입한 연도에 해당되는 소득대체율을 평균한 값으로 결정되며 총 납입기간에 비례한다.

청한 사람이 소득활동 재개로 인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단절기간을 메울 수 있다. 소득단절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은 현재 기준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특히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는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표2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납보험료의 분할 납부

대상기간	분할 납부 횟수
1년 미만	3회
1년~5년	12회
5년 이상	24회

주: 반환일시금 반납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전 가입기간, 추후납부의 경우 소득단절기간 중 추후납부 대상기간
자료: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는 임의가입 제도의 활용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을 통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보험료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9%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⁴⁾ 특히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최소금액으로 맞출 경우 저소득자로 간주하여 낸 돈 대비 수령액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임의가입을 통해 주부 등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네 번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이다. 임의가입이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60~65세의 납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의무납부 기간이지만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령이 어렵거나 연금 수령액을 보다 높이고 싶은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 수급나이가 되어도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부 연장

마지막으로,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20년이지만, 이에 미달하더라도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시 60세가 된 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퇴직 후 2년 이내, 수령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연계

4) 2012년 기준 최소 납입보험료 월 89,1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납입보험료 조정 가능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 수령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에 맞추어 납입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기준소득(보험료)을 높이는 경우에는 신청만으로 가능하지만 낮추는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에 보험료를 두 배로 늘리더라도 수령액은 두 배에 미달하게 된다.

연기연금 신청 시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 7.2%씩 증가

마지막으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1세⁵⁾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기연금 신청을 통해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 경우 **수령받을 연금액은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액**되며 최대 65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표 3 연기연금 신청 시 예상 연금수령액(예시)

(단위: 만 원)

연금개시 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기본연금액	96.5	103.5	110.4	117.4	124.3
총 수령연금액	33,587.3	34,764.1	35,774.0	36,617.2	37,293.5
증감율	-	3.5%	6.5%	9.0%	11.0%

주: 현재 60세, 27~57세 근로, 최종 월급 250만 원, 90세 사망 가정, 현재가치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수령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

1) 가입기간 증대

- a) 반환일시금 반납 - 과거 반환일시금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b) 추후납부 - 납부예외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 c) 임의가입 - 18~60세 중 소득이 없는 자
- d) 임의계속가입 - 60~65세
- e) 타 공적연금 연계 - 타 공적연금 가입 합산기간 20년 이상

2) 가입기간 증대 외의 방법

- a) 납부금액 증대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정
- b) 지급시기 연기 - 연기연금 신청

자료: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증권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6%씩 감액

그 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조기노령 연금의 신청**이다. **앞서의 연기연금과는 정반대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앞당길 때마다 평생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후 60세 이전에 일정 소득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5) 2013년 기준, 매 5년마다 수급개시 연령 1세씩 연장.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

국민연금 수령기간 동안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 저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금액은 5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차후 수령 받을 연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60세 이후 긴급자금 필요 시
국민연금 실버론 활용

저소득자의 경우 일정 요건 만족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매월 납입보험료의 50%(최대 35,550원)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35~125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각각 지원한다.

농·어업 근로자나 일정소득 이하의
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

2. 주택·농지연금

위에서 언급한 공적연금을 통해서만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현실이다.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부동산으로의 자산 집중으로 인한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주택·농지연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고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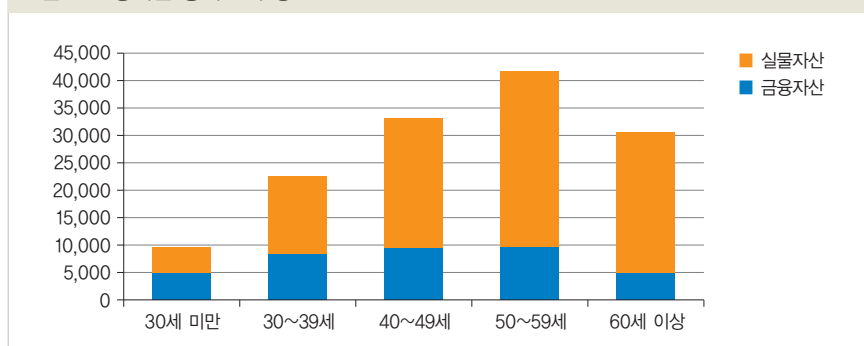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집중으로 인한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상품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만 60세 이상)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고,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가입조건은 상이하지만, 소유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하여 부부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기능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특징

그림1 연령대별 총자산 구성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이
대부분인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짐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가계의 평균자산은 약 3억 1,495만 원으로 약 7,855만 원(24.9%)은 금융자산이고, 나머지 2억 3,639만 원(75.1%)은 실물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실물자산은 대부분(93%)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동산 보유액 중 거주주택(1억 2,019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대부분인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흡한 노후자금 준비의 현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30~60세 국민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쓰는 돈은 평균 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83.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필요금액과 비교했을 때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에 넣은 돈을 빼면 실제 노후자금을 위한 준비금액은 더 적었다.** 사적연금을 따로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31.1%에 불과했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도 한정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소유욕과 애착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특히 이러한 성향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쉽지 않아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공적·사적기능이 미흡한 현실 등 **사회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노후 복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이다.**

주택/농지연금의 장점

- 1) 장수 리스크 헤지 수단
- 2) 제도의 유연성

주택/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둔 은퇴자들이 노후까지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수입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 시 연금 수령액이 확정**되므로 이후 소유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유연성 역시 이들 연금의 장점이다.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한 뒤 패널티가 없이 중도해지 할 수 있다.(초기보증금은 반납 안됨)** 이는 사망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도 적용되며, 만약 상속자가 집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과 보증금을 납

부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택·농지연금의 도입은 미미한 편이다. 전통적인 부동산 집착으로 인한 상실감과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월 지급금이 변동이 없고 해마다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극복이 어렵다는 점이 이들 연금이 가진 한계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퇴직전략!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의 한계

- 1)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
- 2) 인플레이션 극복의 어려움